

# ‘친명 3인 vs 친청 2인’ 구도로 민주당 권력지형 변화 갈림길

## 내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명계 강득구·이건태·유동철  
친청계 이성운·문정복 후보 등록

친명 후보 2명 이상 선출되면  
정청래 대표 체제 견제 가능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 3대 2 구도로 싸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

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 이성운·문정복 의원 등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총 후보 수가 7명 미만이라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할 예정이다.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으로 뽑히게 되며, 권리당원·중앙위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한다.

친명계 후보를 살펴보면 우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이 앞장선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 달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 측과 대립한 바 있다.

친청계 후보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 법률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운 의원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양 계파의 세력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사퇴한 3명(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남아 있다. 당 대표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이 있다.

현재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면 총 3명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청계가 모두 입성해야 과반을 달성해 정 대표 주도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친명 후보가 2명 이상 선출되면 정 대표 체제에 실질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정 대표 연임설이 불거진 만큼 이번 선거가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李 대통령 “다가오는 지방선거서 통합된 자치단체장 뽑아야”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  
수도권 과밀화 대안으로 통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양 지역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부수석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의 인사말 후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다가오는 지선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이날 참

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나 특위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급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확장에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공천 신청 등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합이 내년 지선 전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실무선의 조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 “통일교 특검법 구성·내용 대체로 일치된 교감 나뉘”

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 논의 속도  
세부사항 최종 조율 후 공동발의 방침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방어 용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수사를 위한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여대야소 상황이라 두당이 힘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를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추진은 여권이 내놓은 ‘2차 종합특검’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 등)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4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이번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 대상은 이야기가 상당히 잘됐다”며 “송 원내대표가 말한 쌍특검 부분을 통일교 특검 안에 민중기 특검의 행태도 넣을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세부 사항 최종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

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을 바탕으로 두되,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를 줄이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간만에 보는 ‘보수정당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당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다.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종합 특검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 현재, ‘내란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尹 이후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현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차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 가야 했던 점도 현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현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현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서예진 기자